

황우석 사태와 과학기술동맹

한재각 (민노당)

1. 들어가며

작년 말에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의 대부분이 밝혀지면서 좁은 의미에서의 황우석 사태는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황우석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소위 '황빠 현상'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황우석 사태의 축소, 황우석 박사 외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 및 처벌 외면, 천박하고도 피상적인 대책 제시, 그리고 여전히 강고한 '줄기세포 신화' 등을 보면 황우석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사회가 황우석 사태를 한 과학자의 일탈행위로 국한짓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만 처벌하여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대 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에게만 파면 결정을 내리고 주요 관련자들에게는 정직 3개월 등의 경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의 정부정치권의 주요 관계자인 '황금박쥐'의 김병준 정책실장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가 하면(2006년 3월), 진대제 정통부 前장관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였다(2006년 5월). 또한 국회에서 야당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하였으나(2006년 2월), 현재는 완전히 외면되고 있다.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결과도 역시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혐의, 줄기세포 '바꿔치기'의 진범 등에 맞춰져 있을 뿐이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황우석 사태>는 한 과학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정부정치권, 언론, 재계, 과학계 등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결합된 과학기술동맹¹⁾의 형성, 발

1) 황우석 박사를 중심으로 엮어진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과학기술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환경과 생명> 2005년 여름호(통권 44호)에서 장성의 주간의 글이 처음이었다. 처음에 발표자는 '과학권력'이라는 개념으로 황우석 사태를 분석하고 이해해보려 했으나, '과학권력'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여러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대신해서 '과학기술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한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는데, 황우석 교수의 과학적·사회적·정치적 권력 획득이라는 일차원적인 이해가 아니라, 황우석 교수가 중심이 되더라도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각각의 이해관계의 연결

전과 붕괴에 의해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황우석 사태>는 시기적으로 작년 11월 13일 미국 피치버그대학의 제랄드 샤펜 (Gerald P. Schatten) 교수가 윤리적 문제를 들어 결별을 선언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황우석 사태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이 아니다. 필자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90년대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과학기술동맹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이 어떻게 형성, 발전, 붕괴되었는지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묘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서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의 특징에 대해서 몇가지 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황우석> 사태의 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 황우석 사태의 전사(前史)

<황우석 사태>의 전사(前史)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제소 '영롱이', '진이'를 만들어내면서, 동물복제 전문가로 자리를 잡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1999년 초까지의 시기다. 두 번째 시기는 동물복제 전문가에서 인간배아복제 전문가, 나아가 줄기세포 전문가로 변모하던 시기로서 1999년 중반부터 2003년 말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2004년도 2월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세계적인 '맞춤형 줄기세포' 전문가로 자리잡던 시기인 2004년 초부터 2005년 10월 경까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황우석 사태> 전사(前史), 첫 번째 시기

황우석 前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소의 번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였다. 그는 1985년 중반부터 1년간 동물복제에 관한 기초연구가 활발하던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연구할 기회를 갖고 돌아와서, 1986년도에 서울대 교수로 자리 잡았다. 그 후 황우석 박사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교육부농림부 등의 지원으로 수정란 분할을 통한 동물복제연구를 시작하여 수정란 핵이식을 통한 동물복

을 통한 동맹이 형성되고 붕괴되었다는 다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동맹의 개념을 통해서 황우석 사태를 분석한 책으로는 최근에 출판된 필자의 공저 <침묵과 열광 : 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후마이타스, 2006)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동맹'과 유사한 개념으로 황우석 사태를 분석한 것은 김종영, '복잡사회현상으로서의 과학과 과학기술복합동맹으로서의 황우석', [역사비평] 2006년 봄호(통권 74호)을 참조할 수 있다.

제연구까지 나아갔다. 이어서 1997년에 영국 로스린 연구소의 윌멧 박사에 의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박사도 체세포핵이식 복제연구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1998년부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소 복제에 나섰다. 이 결과로 1999년 2월경 세계에서 5번째 동물복제인 복제소 '영롱이'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얼마되지 않아 다시 복제 한우 '진이'를 탄생시켰다.²⁾

이 시기는 황우석 박사의 '과학기술동맹' 초기 형성단계였다. 황박사는 1990년대 초 중반부터 교육부 및 농림부로부터 가축번식 및 동물복제(수정란복제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관료(특히, 농림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농림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차츰 농림부 연구개발과제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³⁾ 이어서 복제양 돌리 탄생 이후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얻어내 복제소 '영롱이'와 '진이'를 탄생시키면서, 황우석 교수는 과학기술부와 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황우석 교수와 정부를 엮는 핵심적 동맹 관계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한편 황박사는 정치의 핵심권력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부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제1회 회의의 특별보고로 황우석 박사가 대통령 및 과학기술 관련 장관들 앞에서 직접 복제소 탄생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일이 있던 후에 황우석 박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으로 발탁되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는 복제 한우의 이름으로 '진이'라는 이름도 받았다.

또한 복제소 '영롱이', '진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 기자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동료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황우석 박사의 '기자회견 과학자' 스타일이 주요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롱이 탄생 관련 비디오를 황우석 박사가 직접 제작해서 언론사에 배포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무비판적인 보도를 시작하기 했다.

2) <황우석 사태> 전사(前史), 두 번째 시기

황우석 박사는 2000년 8월부터 언론을 통해서 인간배아복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

-
- 2) 물론 '영롱이'와 '진이'가 과연 진짜 복제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며, 특히 '영롱이'의 경우 이것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 DNA지문 검사 기록은 '이사 중에 분실'되었고, 복제된 어미의 체세포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 3) 특히 이 시기의 황우석 박사와 농림부와 '유착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소위 '브루셀라병 파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침묵과 열광>의 1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소의 난자를 이용한 '이종(異種)간 핵이식'이었는데, 이것은 임상수의학을 전공한 황우석 박사가 여성의 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행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은 2002년도에 산부인과 의사들인 노성일 박사와 문신용 교수를 만나면서 해결되었다. 또한 맞춤형 줄기세포연구와 함께, 황우석 교수의 3대 주력 연구이었던 이종간 이식을 위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2002년 8월)과 '광우병 내성 소 생산'(2003년 12월) 연구 성공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3년 12월에는 '형질전환 무균 복제돼지 생산' 성공 소식도 전했다.

과학기술동맹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동맹의 핵심세력을 구축하고 확대해나가는 시기에 해당한다. 우선 동맹의 핵심세력으로 노성일—문신용—황우석의 '도원결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중반, 전경련 산하의 바이오산업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만난 황우석 박사, 문신용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함께 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를 진행하기로 '도원결의'하였다. 이로서 황우석 교수는 여성 난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했는데, 앞서 여성 난자를 구하지 못해서 소 난자를 이용하였던 일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황우석 박사에게 부족한 줄기세포 배양기술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문신용 교수는 2002년 후반부터 줄기세포연구 지원을 위해서 과학기술부가 1년에 100억씩 10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총괄책임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황우석 박사가 국내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핵심인물을 든든한 배경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황우석 박사의 과학기술동맹은 제도적 측면으로도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핵심 권력과 연결되고 생명공학계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생명윤리법> 제정 논란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였는데, 이때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두 부처가 마련한 2001년의 초기 법안들은 황우석 박사의 핵심적인 연구, 즉 인간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후 생명윤리법 제정 주도권을 둘러싼 과기부와 보건복지부의 경쟁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합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생명윤리법 부칙조항을 통해서 달성되었다. 2004년과 2005년 황박사의 연구의 합법적 토대가 된 조항들이었다.⁴⁾

그러나 초기에는 법안이 황우석 박사의 핵심연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안하자, 황우석 박사 자신을 포함한 관련 생명과학계 및 바이오산업계 등은 이 법안에 대해서

4) 생명윤리법 제정과정 및 부칙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침묵과 열광> 4장을 참고할 것.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내기 시작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된 당시 박기영 교수(순천대)는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가하여 황우석 교수를 비롯하여 생명공학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동안 생명윤리법 제정을 주장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박기영 교수에게는 황우석 교수와는 인연을 맺는 계기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기영 교수는 청와대의 핵심동맹으로 자리잡아 소위 '황금박쥐' 구성의 단초가 되었다.

정부는 황우석 박사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 시기에 막대한 연구비 지원도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비 지원은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부를 거쳐 지원한 '생명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이었다. (2001년부터 3년간 43억원 지원). 또한 교육부가 2001년 1월부터 5년간 '체외수정유래 소핵이식란의 배양에 관한 연구 등' 총 3개 연구에 4억여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 연구비 및 민간 지원비를 바탕으로 하여, 황우석 박사는 자신의 3대 핵심 연구분야인 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 광우병 내성소 연구, 이종간 장기이식 연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한편 농림부와 축산기술연구소는 황우석 교수가 개발한 우량소 복제배아를 전국의 축산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추진하여, 2002년 초에 농가에 복제소 보급 사업이 성과를 얻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탄생한 복제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 일은 황우석 박사의 과학기술동맹의 발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기자들의 황우석 박사와의 유착은 보다 심화되었다. 이들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과학언론의 태도에 덧붙여, 황우석 교수에 대해서는 유독 우호적인 반면 황박사에 대한 비판에는 철저히 외면하는 태도를 본격적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황우석 언론장학생'이라는 거론되었던 한 중앙일간지 기사는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또한 '삼원 이종간⁵⁾ 동물복제였던 호랑이 복제 소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은 고사하고 '주라기 공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식의 환상을 부치기기에 앞장섰다. 광우병 내성소 탄생소식을 전 하면서는 그 진의를 따지기는 고사하고, 당장이라도 축산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3) <황우석 사태> 전사(前史), 세 번째 시기

5) 핵을 제거한 고양이 난자에 호랑이 체세포 핵을 넣어 복제배아를 만든 후에, 암사자 자궁에 착상시켰다.

황우석 박사는 2004년 2월 <사이언스>지에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추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242개의 여성 난자를 이용하였으며, 결국 한 여성의 체세포의 핵을 동일한 난자공여 여성의 난자에 집어넣어서 1개의 줄기세포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년이 넘어서 황박사는 2005년 5월 <사이언스>지에 11개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추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때는 총 186개의 난자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연령대 및 성별, 환자의 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소위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성과—이후에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났지만—를 바탕으로 황우석 박사는 국민적 영웅을 넘어서,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노성일, 문신용 교수 등의 핵심동맹세력에서 나아가 정권 핵심부 및 해외 연구자들까지도 동맹세력을 확대해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화제되었던 것은 '황금박쥐'라는 모임이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2004년 초에 청와대 과학기술보조관으로 임명된 후, 청와대 김병운 정책실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함께 '황금박쥐'라는 정권 내 이너씨클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지원이 박기영 보좌관이 직접 발표한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당시 예산 265억원)이었으며, 이외의 정통부의 황우석 기념우표 발행이나 UN 인간복제금지협약 체결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논의 등이 황금박쥐 모임에서 이루어졌다.⁶⁾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 발표 이후에 본격화된 황우석 박사의 해외 동맹세력의 확대는 2005년 10월에 출범한 '세계줄기세포허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전세계의 줄기세포연구자들(예를 들어, 영국의 월렛 박사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고, 미국의 새튼 교수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세계줄기세포허브에 이사장 직함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⁷⁾ 그런데 '세계줄기세포허브'는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 없이 '묻지마' 식으로 추진한 것이며, 이에 청와대 등도 적극 거들고 나선 것이다.⁸⁾

- 6) 정권 핵심인사들의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지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 아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003년 말, 노무현 대통령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에 방문하여, 광우병 내성 소와 형질전환 미니무균돼지 연구의 성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극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최고 권력자의 확실한 신뢰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라 느꼈다"며 "동북아 시대, 2만 달러 시대의 가능성과 희망을 확실히 발견했"고 "감동에 몸이 떨릴 만큼 감전됐다"고 발언하였다.
- 7) 황우석의 과학기술동맹의 해외로 확장한 상황을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로 흥미롭게 분석한 내용은 김충영의 위의 글 7절을 참고할 것.
- 8)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던 서울대의 '세계줄기세포허브'는 개원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았고, 63억원의 서울대병원은 예산 회수나 허브에 등록된 1만여명 이상의 난치병 환자들의 대한 보상 등의 술한 문제를 마땅한 해결책 없이 남겨두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측이나 정부 측, 모두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한편 보건복지부의 세계줄기세포허브는 보다 큰 맥락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소위 '의료산업 선진화정책' 추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핵심은 2005년 10월 경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맡아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BT에 기반한 첨단의료산업 창출과 병원 영리법인화 정책이었다. 이 위원회에는 황우석 박사 자신을 포함해 '황우석 사단'으로 불리던 노성일 이사장과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의 황우석 동맹의 핵심인사가 참여하고 있었다.

정치권의 동맹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은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황우석 교수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주의의 압도적 정치적 담론 속에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해서는 국회 고유의 정부정책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이 주도하는 싸이엔테크포럼이 황우석 박사를 초청하여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황우석 박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였다.

기업들 역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후원을 시작했다. 기업들은 황우석 박사에게 복제소 '영롱이'를 만들어낸 이후에 연구비를 일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 이후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삼성, SK, LG, 포스코, 대한항공, 동원그룹 등이 (사)신산업전략연구원 및 한국과학재단의 황우석 후원회 등을 창구로 해서 황우석 박사에게 72억여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⁹⁾ 한편 기업이나 주식투자자들에게 황우석 박사의 성공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었다. 증권거래소는 2005년도 10대 상품 중에 하나로 '황우석 종목'을 뽑았는데, 이는 황우석 박사가 2004년 <사이언스>지 논문 발표이후, 연구성과가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BT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배아복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상품화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상업적인 연구개발 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 일이었다. 황우석 박사의 지지에 대한 투기적 속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시기에 대중적인 차원에서 부각된 특징적 모습은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부추긴 애국주의적 선동과 대중들의 열광적 호응이었다. 이 것은 황우석의 과학기술동맹이 (인터넷)언론을 매개로 대중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파시즘'의 초기 형태가 아닌가 우려할 정도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어떠한 이론(異論)과 비판도 부정시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황우석 박사가 스스로의 애국적인 선동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고지, 미국에 태극기를 꽂고 왔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서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줄기세포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55>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결과', 2006. 5. 12.

찍고 싶다” 등의 발언이 그것이었고, 이를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해내기 시작하였다. 이어 8월에 복제개 ‘스니피’에 대한 논문을 <네이처>지에 게재하면서, 그런 열광과 지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증폭되었다.¹⁰⁾

그런데 대중적 차원에서까지 확장되고 공고화된 황우석 동맹이 붕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겠지만, 이 시기에 <황우석 사태>를 예비하고 있었던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2004년 2월 <사이언스>지에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확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대부분의 국내의 반응은 새로운 기술적 성취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224개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국생명윤리학회나 시민과학센터 등의 일부 비판자들은 그토록 많은 난자를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였다. 또한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는 반향을 얻지 못하고 묻혀졌다.

그러나 국외에서 제기된 문제제기는 조금 상황이 달랐다. 2004년 5월, <네이처>지는 황우석 교수의 여성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했다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황우석 교수 측은 해당 여성연구원의 영어부족으로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부정을 하였고, 국내 언론은 이 문제제기를 아예 무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은 난자 확보과정, 한양대 IRB의 역할, 논문저자 표시 문제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공개토론할 것을 요청하면서 불씨를 살려놓고 있었다. 한편 황우석 사태에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5년도 6월에 만들어졌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 문제점을 알고 있던 제보자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연락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였던 MBC <PD수첩>이 5~6개월 이상의 장기 탐사취재를 시작하였다. <황우석 사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직접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3. <황우석 사태>의 전개

작년 11월 12일의 미국 새튼 교수가 황우석 박사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은 본격적인 황우석 사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래에서는 이 이후부터 전개된 황우석 사태를 몇가지 주제를 잡아서, 중요 장면과 과학기술동맹의 대응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사태 전개의 시간적 순서와 일치한다.

10)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열광적 지지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침묵과 열광> 10장을 참조할 것

1) 남자 윤리위반 논란 제기

새튼 교수의 결별 선언이 알려진 후 얼마 되지 않아, 11월 21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갖았다. 2004년도 논문 연구를 위해 20명의 여성으로부터 각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난자를 뽑아서 황우석 연구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노이사장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우석 박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감싸고 들었지만, 의혹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방영이 임박한 MBC <PD> 수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동맹 측의 대응의 일부로 평가된다.

11월 22일 드디어 MBC <PD수첩>이 방영되었다. <PD수첩>의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노성일 이사장이 시인한 연구용 난자의 매매 사실 이외에도,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경제적 곤경에 처해진 사회적 약자라는 점도 부각되었다. 또한 황우석 박사가 거듭 부정해오던 여성연구원의 난자 제공 사실까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해오던 황우석 박사의 정직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황우석 박사는 24일에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D수첩>이 제기된 여성연구원 난자 채취를 시인했다. 하지만 자신은 이를 말렸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며, <네이처>지 인터뷰 이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여성연구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숨겨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요하게 다루게 될 쟁점이 되었다.

<PD수첩>의 방영은 '황우석 애국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황우석에 대한 어떠한 이론과 비판도 용서되지 않았으며, 모두 '매국노'로 단죄되었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한학수 PD와 MBC를 향해 거리낌 없이 '인터넷 테러'를 자행했으며, 기업이 방송 광고를 끊도록 하는 불매운동을 조직하여 사상 초유의 무광고 방송을 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황우석을 지지하는 여론이 98%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 정치학자의 표현대로 유사 '파시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¹¹⁾

황우석 과학기술동맹 측도 난자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논란에 대해서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나름의 기획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수의대 IRB의 보고서였다. 11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 IRB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팀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특히나 이 보고서는 여성 연구원 난자 제공의 연구윤리 논란을 보편적인 연

11) 박상훈, '대중은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파시즘에 빠지는가', <프레시안>, 2006. 1. 21. 황우석 애국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우려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해서는 <침묵과 열광> 10장을 참고할 수 있다.

구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한 문제라고 주장하여 새로운 논란을 만들었다.¹²⁾

하지만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수의대 IRB의 보고서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며, 또한 그것을 작성한 IRB의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들었다. 심지어 서울대 이영순 교수는 자신이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 10개월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IRB의 거짓보고서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게 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었다. 애초에 이 보고서를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IRB 위원장이 발표하려는 것을 박기영 보좌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전화로 지시하여 보건복지부가 직접 발표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¹³⁾

2) 연구논문 진위 여부 논란 제기, 그리고 YTN의 반전

황우석 사태에서 연구논문 조작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필연적인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연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어쩌면 피해갈 수 있었거나 적어도 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불거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11월 27일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기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글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쓴 글에서 MBC <PD수첩>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여부에 대해서 취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짜증스럽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예단을 제시하였다. 이는 박기영 보좌관의 편향된 정보 보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황우석 교수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사태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먼저 <PD수첩>의 논문조작 여부 취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언급된 논문조작 여부에 대한 <PD수첩> 취재사실은, 곧 중앙일보 등의 일간지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기정사실화되었다.¹⁴⁾

12) 이런 주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홍성욱, '과학기술학은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역사비평] 2006년 봄호(통권 74호). 특히 6절 '연구윤리와 아시아적 가치'를 볼 것.

13)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청와대, 2005. 11. 24. 황교수팀 난자 조달의 문제점 축소·왜곡 기자회견에 개입, 2006. 2. 20.

14) 필자가 아는 한 <PD수첩>이 논문조작에 관한 취재내용을 실제로 방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까지는 어느 것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MBC <PD수첩>의 방영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은 <PD수첩>이 방영되고 논문조작 논란이 확산되어 파국적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신속히 움직였다. 12월 4일, 일요일 낮부터 YTN을 통한 대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PD수첩>에게 논문조작 가능성에 대해 ‘중대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던 미국 피치버그대에 가 있는 김선종 연구원의 인터뷰를 YTN이 단독 보도한 것이다. “황우석을 죽이러 왔다”고 김연구원을 협박했다며, <PD수첩>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폭로하였다. 이 보도로 타격을 입은 MBC는 너무도 신속하게도 엎드렸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PD수첩>의 방영을 취소하였다.

가뜩이나 ‘황우석 애국주의’ 선동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취재윤리 위반논란은 장작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이미 드러난 황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까지도 덩달아 묻혀지는 듯 했다. 여기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나섰다. YTN의 ‘청부취재’ 보도가 있던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황우석 사태를 ‘이제 덮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보다는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후 사태 불행한 전개에 구속력으로 작용하였다.

3) BRIC의 대반전, 황우석 동맹의 완강한 저항

하지만 또다른 반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진원지는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생물학정보센터(BRIC) 사이트의 취업 게시판이었다. BRIC의 익명의 과학자들은 황우석 박사의 논문에 실린 사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배아복제 줄기세포의 DNA지문 분석자료까지 조작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런 분석들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여론에 공개되고 확산되면서, 황우석 사태의 전개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아갔다.

이에 자극받아 12월 8일 서울대 소장 교수들도 황교수 논문을 재검증할 것을 서울대 총장에게 요구하였다. 이의 수용 여부를 갈짓자 행보를 걸었지만¹⁵⁾, 결국 11일에 서울대는 재검증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쯤 되자 논문조작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날 것이 예상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황우석과 노성일 이사장 사이의 불화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5일 저녁 맞춤형줄기세포가 없다는 폭탄과 같은 노성일 교수의 인터뷰가 방송되었고, 그날 밤 YTN 보도로 방영이 취소되었던 <PD수첩>이 드디어 전파를 타게 되었다. 다음 날 황우석과 노성일 이사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

15)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서울대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재검증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도 서울대의 '황우석 조사' 막았다" <프레시안> 2006. 2. 24.

넘기는 기자회견을 펼치면서, 결국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재검증 실시 결정으로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황우석 박사의 2004년과 2005년 논문 모두를 조작했으며 두 연구에 사용한 난자 채취시에도 연구윤리를 위반했고, 심지어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황우석 박사의 과학사기 사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곧이어 <사이언스>는 황우석의 논문을 직권 철회했으며, 서울대는 황교수를 비롯하여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거나 뒤졌거나 하여 검찰의 수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어서, 속속 황우석 박사의 위법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12월 16일의 황우석 박사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생각으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원천기술’론과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장은 일부 언론과 네티즌을 통해서 확대되어 갔고, 이들은 이 논리에 기반해서 서울대조사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수사조사기관의 결론에 대해서 여전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각종 모임이 생겨나면서 소위 ‘황빠’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로서 <황우석 사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고하였다.

BRIC과 <프레시안>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반전에도 역시나 과학기술동맹의 버팀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서 12월 8일, 오명 과학기술장관 겸 부총리는 서울대 소장교수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황우석 교수 논문의 조작 여부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의 의견”이라고 일축하면서, 재검증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중간발표 하기 전날인 22일, 오명 부총리가 서울대 정운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니 중간발표보다는 전체적인 진상 파악이 가능한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실상 파장을 축소하고 나아가 진실을 은폐하려 서울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황우석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나선 세력은 핵심 당사자인 황우석 박사 등의 연구자들만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 등의 정부 관료, ‘청부취재’라고 비난 받은 YTN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 및 기자, 그리고 ‘황빠’로 불리는 열광적 황우석 지지자들이었다. 이외에 이 글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일부 생명윤리학자, 서울대 송호근 교수나 탄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같은 영향력있는 지식인들도 빠질 수 없다. 한편 황우석 사태가 전개되면서 뒤를 물러나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했던 기업들의 대응은 미비했다. 어찌보면 황우석 사태의 전개에서 진실 은폐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

직었던 순서에 따라,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에 각각 세력이 얼마나 강력히 결합되어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황우석의 '타락한' 과학기술동맹은 어떻게 가능했나?

1) 과학기술동맹 자체가 문제가 될까?

앞서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였으며 붕괴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이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학(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udies)의 연구하는 홍성태, 김종영과 같은 학자들은 현대의 과학연구 활동에서 과학기술동맹의 형성은 본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이들에 의하면 근대 초기 비교적 소규모의 과학연구(예를 들어 파스퇴르의 백신연구)에서부터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과학연구(원자탄 개발이나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등)까지, 실험실 안에서 과학자의 활동만으로는 과학연구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연구의 대상인 자연세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좁은 의미의 과학활동),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의 인정,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자금의 조달, 정책적인 지원, 연구성과의 활용에 필요한 기업과의 연결, 이를 사용할 시민들의 기술 수용력의 형성 등이 결합되지 않고는 현대의 과학활동을 완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넓은 의미의 과학활동). 따라서 현대 과학연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동맹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STS 연구자들은 황우석 사태를 과학기술동맹의 형성과 붕괴라는 시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조심스러워 한다. 황우석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은 과학자가 순수하게 실험실에서 연구하지 않고, 정치가, 관료, 기업, 언론 등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과학 순수주의'가 대중들의 인식 속에 더욱 확고히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암흑 상자'로만 다루어졌던 과학연구 활동의 과학기술동맹 차원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현대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과학기술동맹인가에 있다. 김종영 박사의 지적처럼, "논문조

16) 김종영과 홍성욱의 앞의 글을 참조

작과 윤리문제로 얼룩진 황우석 사태가 공적 영역에서의 총체적인 사기사건으로 나타난 것은 ‘과학기술복합동맹’을 이루었던 각 연합세력들이 과학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도덕성, 책임성, 정직성을 상실했기 때문¹⁷⁾이라면, 황우석의 동맹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한 ‘타락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타락한 과학기술동맹은 자본과 국가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반영하며, 엘리트 과학자, 정부관료, 기업가 등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대중을 소외시킨 채 과학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던 것이다. 그 한 예가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타락한 과학기술동맹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소위 ‘원자력 마피아’로 불리는 과학기술동맹도 있으며, 새만금이나 천성산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관여된 과학기술동맹 등도 있다. 몇 년 전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네이스(NEIS)이나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 뒤에도 타락한 과학기술동맹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이들 과학기술동맹과 다르게 황우석 동맹이 이토록 극적으로 붕괴되고 여론의 광장에 내던져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시되고 있는 한가지 설명은 황우석 박사가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논문을 조작했다는 사실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과학기술동맹이라면 적어도 최종적으로 동맹의 안전을 보장할 ‘과학적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¹⁸⁾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과학적 성과’가 있는 동맹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채, 시민의 관심저 밖에서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일들을 벌여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실패한 과학기술동맹보다 성공한 과학기술동맹이 더 우려스럽다.

2) 타락한 ‘과학기술동맹’은 어떻게 가능했나?

이번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은 한국의 고도성장기의 박정희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사회적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배태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홍성태 교수는 박정희 정권에 만들어진 ‘결과지상주의’, ‘경제성장주의’, ‘과학주의’, ‘전문가주의’ 등이 이번에 <황우석 사태>에서 찾아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¹⁹⁾ 비슷한 주장으로, 김

17) 김종영, 앞의 글, 89쪽.

18) 김종영과 홍성욱의 앞의 글을 참조. 특히 김종영은 라투어 등의 해위자연결망 이론을 인용하면서, 과학기술동맹을 맺는 모든 요소가 거쳐가야 하는 ‘필수통과지점’인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실험의 조작이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성욱 역시 같은 이론을 인용하면서, 황우석 교수가 연구대상과의 역관계를 바꾸는(즉,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과학연구에서의 근본적 의미의 정치활동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여 황우석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석 교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를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 민주화가 일정정도 진행되었으나, 과학기술정책영역만은 여전히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민주화에서 뒤늦은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결과지상주의', '경제지상주의', '과학주의', '전문주의' 등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황우석 사태>를 배태시켰다고 평가한다²⁰⁾

그러나 박정희 체제, 혹은 패러다임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듯 하다. 박정희 체제의 독소가 왜 하필이면 2005년도 겨울에 <황우석 사태>라는 사건으로 터져 나왔는가를 이해하는데는 다른 설명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 노무현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와 이를 야기시킨 '신자유주의 성장동맹'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의를 주목할 수 있다.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운동의 성과의 연장선에서 보수기득권 집단과 격렬한 투쟁 속에서 태어난 민주정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이를 위한 '신자유주의 성장동맹'이라는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아서 현 정부의 사회적 기반을 만회하기 위한 무엇인가 성과를 찾고 있는데, 그 해답이 '황우석'이라는 분석이다.²¹⁾

이와 같은 최장집 교수의 분석에서는 '황우석'은 정부의 사회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권에 의해서 동원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김환석 교수는 '황우석'의 변수를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여, "'신자유주의적 생산체계'의 핵심에 황우석 사태가 배태되어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즉, IMF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김대중 정권이 정보기술(IT)을 집중지원하였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에 더하여 생명공학기술(BT)의 발전에 상당한 정치적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²²⁾ 그런데 생명공학기술에 탑재되어 있는(혹은 결합되어 있는) 신자유주의적 속성들은 여러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다.²³⁾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생명공학기술이 다른 어떤 과학기술 분야보다도 보다 빠르게 상업화되어 연구 초기부터 기업의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인간신체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상품화되고 있는지 비판하여 왔다.²⁴⁾ 이런 점에서—비록 이 글에서는 자세

19) 홍성태, '황우석 사태와 한국 사회 : 정언착 유착망과 박정희 체제의 덫',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의 과학과 민주주의], 2006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심포지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2006. 2. 2

20) 김환석,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생명공학감시연대 토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 2006. 1. 18.

2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 한국사회 위기 진단과 희망 찾기],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성공회대 새천년관 4층 교수회의실, 2006. 1. 12.

22) 김환석, 앞의 글

23) 한재각, '신자유주의자의 놀라운 마술 : 생명공학—생명공학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몇가지 작업가설', 권영근 편, [위험한 미래 : 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 2000.

히 다루지 못했지만—황우석의 과학기술동맹의 기원을 한국적 맥락에서 찾는 것 못지 않게 지구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이 전면에 부각된 기득권 계층의 동맹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수많은 기득권 계층의 동맹에서 과학기술자들은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넘지 못했다(예를 들어, 금강산담 대국민 사기사건에서 63빌딩 중간까지 물을 찰 것이라고 자극적인 그림과 함께 주장했던 토목공학 관련 과학자들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황우석 박사는 더 이상 기득권 계층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핵심적인 인물이었으며, 동맹의 근간을 구성한 것은 수구적인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맞춤형 즐기세포'라는 (비록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과학적 성과와 이에 연결된 경제성장주의애국주의였다.

이런 변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자)의 위상이 변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²⁴⁾ 실제로 한국의 과학기술은 한국의 국제적인 경제규모 등에 비례해서 (분야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IT 및 BT의 일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두그룹에 합류해 있다. 특히—일부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동물복제 분야 등은 세계 선두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나 정보통신 분야도 세계 선두에 있는 기술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와 병행해서 기업이나 정부에서 과학기술(자)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이공계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로서 전공 분야 중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 보았을 때도 최근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하는가 하면, 진대채, 박기영, 오명, 이희범 등 과학기술기술자 출신들이 대거 장관 측에 기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주요한 도구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며, 황우석 과학기술동맹의 출현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24) 로리 앤드루스·도로서 넬킨(김명진·김병수 옮김), [인체 시장], 궁리, 2006; 앤드류 김브렐(김동광 옮김), '휴먼보디숍', 김영사, 1997.

25) 김환석, '황우석 사태의 정치적 함의', [황우석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교협 학술토론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기념관, 2003. 3. 10. 물론 이런 흐름은 양극화로 나타나는데, 상층 엘리트 과학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하위 과학기술자들은 비정규직, 임시적 노동자로서 심각히 낙후된 급여와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 드러난 연구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국회 싸이엔텍포럼,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인력 비정규직 현황 및 대책 공청회], 2004. 8. 11.

5. 글을 정리하며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동맹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STS와 같은 학문적 관심사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하는 정치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요구된다. 또한 황우석 사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불거진 '타락한' 과학기술동맹에 의한 사회적 비극이었다. 이런 비극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혹은 지구적으로 형성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동맹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황우석 사태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했지만, 이로부터 우리 사회가 '타락한' 과학기술동맹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황우석 사태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지도 모른다.